

# “남도장터, 지속가능한 홍보 방안 마련해야”

신승철 “정확한 홍보 대상 분석 없어”  
유통 컨트롤타워... 방향설정 시급  
류기준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뒤야”



신승철 도의원 류기준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남도장터의 홍보 예산 집행 우려와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서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적 역할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13일 전남도의회 농수산물위원회 신승철(영암) 의원은 최근 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법인 출범 이후 남도장터가 도의회와의 소통부재와 홍보예산의 무분

별한 집행, 위탁운영 실태 등 관련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남도장터는 버스 랩핑광고, 아파트 승강기 광고, 프로야구장 홍보 등 정확한 홍보 대상에 대한 분석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업무계획

에 누락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도장터의 홍보비가 남약 아울렛이나 시내버스 등 연속성 없는 일회성 홍보에 그치는 데 사용되면서 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회적인 홍보가 아닌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기준(화순2) 의원 또한 “남도장터는 소평물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인 ‘사회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전남도가 과거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다 지난 2022년 직접 재단법

인으로 출범시킨 (재)남도장터는 직영화 이관 부족과 인력 부재 등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짚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파도 피하지 못해 미정산액 또한 7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남도장터는 전남 농수축산물을 거래하는 대표 온라인 소평물로서 농어민이 정성껏 기른 우리 농수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대표 유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6년 완전 직영체제 전환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반드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며 ‘농특산물 마케팅과 유통 분야의 중심 역할’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남도장터가 초기 정착 단계인 만큼 소관 상임위와 추진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남도장터 김경호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중요 업무 추진시 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며 “그동안의 소통 부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성범죄 직원 장기간 묵인한 광주테크노파크

기소 후에도 간부 감사실에 배치  
파면 뒤 퇴직금 전액 지급 논란도  
TP “늦게 피해자 메일받아 죄송”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가 계약 관계인 기업의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 2년 가까이 징계를 묵인하고 뒤늦게 파면 후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파크 직원 A씨가 2022년 11월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2024년 1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며 “테크노파크는 범행 한 달 후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심각한 것은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테크노파크는 올해 6월 인사에서 A씨를 반부패,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했다”며

“A씨는 또 올해 9월 파면된 후 퇴직금까지 모두 챙겨갔다. 테크노파크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이렇게 가해 직원에 대해 늦장 대처할 수 있었을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철의 의원은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먼저 피해 여성에 대해 사과드린다. 가해 직원의 1심 선고를 피해자가 메일을 보낸 지난 7월에야 알게 돼 징계 절차 늦어졌다”며 “퇴직금의 경우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 결과 공무원이 아니어서 (퇴직금) 감액할 수 없게 돼 100%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부실한 자료가 곳곳에서 드러나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3일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임미란 시의원 “광주 노동인권회관 설립 좌초 우려”

광주시가 지역 노동자의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 설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미란(사진)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은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2022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9년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과 공동으로 노동인권회

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광주 남구 지석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회관을 조성해 노동인권역사 전시관·교육 공간·노동자 복지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재정 부담과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회관 건립에 관한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임 의원은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간 이후 향후 계획도 없고 2025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며 “노동권 증진과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내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사업 시기를 조정 중”이라며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성현 기자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주최 광주 동구청,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주관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

### 광주충장상권 르네상스사업

# 충장상권 정체성 찾기

#### <좌담회> 무엇으로 특화 시킬 것인가

일 정 : 11월 15일 (금) 오후 2:00 ~ 4:00  
신 청 : 우측 QR코드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신청  
장 소 : 전남일보 지하 1층 승정문화관



일 정	내 용		
오후 2:00~3:00	충장로 정체성 찾아가기 - 무엇으로 특화시킬 것인가	임창욱 호남대학교 교수	
오후 3:10~4:00	좌담회 진행	좌장	임창욱 호남대학교 교수
		패널	심수홍 ㈜시너지타워마케팅 총괄책임자
			신지양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센터장
			문유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북부센터장
		박상규 지역상권진흥협동조합 이사	
		김정록 유통경영연구원장	

#### <명사초청특강> 충장상권의 가능성

일 정 : 11월 21일 (목) 오후 4:00 ~ 6:00  
신 청 : 우측 QR코드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신청  
장 소 :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명 사 : 모종린 교수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처 처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